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 위한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 5~18일 시민 안전 편익 증진 · 민생경제 활성화 · 비상진료 체계 확립 등 4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 집중

전주시가 모든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가동기로 했다.

시는 5일부터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인 18일까지 약 2주간 △시민 안전 편익 증진 △민생경제 활성화 △비상진료 체계 확립 △종합대책 시민홍보 등 4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로 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먼저 시는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각 분야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만약의 사건·사고 및 재난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연휴 전 취약지역 및 시설물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한 적치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내수경기 활성화 진작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설 연휴 전 행정안전부·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물가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와 설 명절 성수품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 현장지도 점검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비상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과 감염병 발생 대비 비상대응반을 운영함으로써 연휴 기간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휴 기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유선 안내 및 홈페이지, 스마트폰,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이외에도 시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6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추진하고, 이렇게 모인 물품과 성금 등을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만든다는 구상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설 명절 연휴 동안 귀성객과 시민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면서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는데 갑작스러운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하고, 전주를 찾는 귀성·귀경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 명절 연휴 전주시 공공운영시설 개방 여부와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전주시 2026 설 명절 통합정보 안내 누리집'도 운영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누구에게나 열린 숲길'

전주시,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완료

전주 도심 속 휴식공간인 건지산에 보행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숲길이 제공된다.

전주시는 건지산 일원에서 추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은 전북대학병원 뒤편 조경단과 덕진체련공원을 잇는 구간에 총연장 약 1.4㎞ 규모로 조성됐으며, 데크길 870m와 숲길 500m, 세족장, 쉼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이 사업에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지원하는 복권기금 녹색자금 8억원과 시비 6억원 등 총 14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산림휴양 체험 기회가 부족한 보행약자에게 산림휴양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 전북대학교가 시민들을 위해 해당 토지 사용을 승낙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시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산림치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모두를 위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덕진체련공원과 전북대학병원 뒤편의 기존 데크길을 연결해 단절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시는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된 만큼 시민들이 건지산의 완만한 경사와 다양한 수종이 어우러진 길을 따라 일상적인 여가를 즐기고, 심신의 회복을 위한 산림치유 공간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가로등 조도 개선으로 밝고 안전한 전주 조성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전주시가 노후화된 가로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밤거리를 제공하고 전기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노후화된 가로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된 본격적인 조도 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이 낮고 밝기가 떨어지는 기존 나트륨·메탈 가로등을 단계적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교통량이 많거나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구간, 범죄 취약지역, 주거 밀집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LED 가로등 7917등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야간 시인성 향상은 물론,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측면의 효율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LED 조명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 가로등의 2025년 전력 사용량은 사업 전 대비 1510MWh(메가와트시)가 절감됐으며, 이에 따른 전기요금도 약 4억 1800만 원 감소했다. 이는 전체 가로등 전기요금의 약 12%를 절감한 수치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CO2)도 전년 대비 약 694톤 저감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전주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2일 시청 3층 부시장실에서 '2026년 숨은세원 발굴 조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전주시, 올해도 숨은세원 발굴 조사단 운영

전주시가 올해도 탈루·은닉 세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숨은세원 발굴 조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2일 시청 3층 부시장실에서 '2026년 숨은세원 발굴 조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전주시 세정행정의 핵심 과제인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세무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단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시는 특히 조사 분야를 더욱 세분화하고, 사전 안내와 자진신고 유도를 강화하는 등 시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세원 발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조사단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2일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는 2일 전주시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 및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장의 공사 진행 현황을 비롯해 주민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을 둘러보고, 안전관리 체계 및 향후 계획 등을 살폈다.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3,563.41㎡, 지상 3층 규모로, 주민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서 행정·복지·문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최용철 위원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공시설"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경오)은 지난달 30일 전주시청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철환)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전주 · 안동 공무원노동조합 자매결연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합리적 변화를 선도하는 전주시와 안동시의 공무원 노동조합이 영·호남의 경계를 넘어 강력한 '실용주의 연대'를 선포했다.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경오)은 지난달 30일 전주시청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철환)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노조가 과거 투쟁 중심의 노선에서 탈피하여,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조합원 실익 중심의 노동운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 아래 추진됐다.

특히 이번 만남은 두 조직이 걸어온 서로 다른 '혁신의 경로'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협약식에서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 김경오 위원장은 "전주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축적한 역동적인 '성장 DNA'와 안동시 노조가 보여준 압도적인 '혁신 에너지'가 만났다"며, "우리 두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운동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